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 동안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전세계 189개 당사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NGO 등 10,000여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높아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약 60명의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파견, 협상에 임했으며, 산업계도 상의 주관하에 한국서부발전의 손동희 본부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GS칼텍스, LG화학, SK, 삼성, 포스코, 발전사 등 20명이 참여한 산업계 대표단도 역대 최고 규모로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국내 기업들도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부속서 I 국가(선진국)의 2012년 이후 추가의무부담 협상 및 향후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각각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 이틀간의 철야협상을 통해 부속서 I 국가들의 2012년 이후의 추가의무 부담을 논의할 협상을 위해 임시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내년 5월에 출범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장기 행동협력(long-term cooperative action)을 위해 공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의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이행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는 교토의정서 세부이행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이 공식 채택되어 향후 감축의무를 할당받

은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합의문에는 개도국의 역량 강화, 재정 및 기술지원방안, 교토메타니즘의 운영방법, 선진국의 의무준수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관련 협의

금번 회의기간 중에는 미국의 주도로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도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6개국은 기술이전 등 협력을 위한 활동계획에 합의하여 현장채택 및 파트너십 공식 발족을 위한 각료회의를 내년 1월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전력 및 산업 부문 8개 기술 협력 분야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제도 개선

논의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CDM 사업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향후 CDM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즉, 2012년 이후까지 CDM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program)까지 CDM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Program에 대한 정의는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CDM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검증방법의 단순화와 명확성 확보 등의 문제는 집행이사회가 방안을 강구하여 역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개도국의 산림보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에 대해서는 인정절차와 방법론 등을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당사국간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